

## 중국의 외상투자 등록제도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최송자 경남대학교 중국학과 부교수

### 주요내용

- (현황) 2016년부터 중국은 전국적 범위에서 외상투자기업의 설립과 변경 관리방식을 ‘전면전 심사비준제’에서 ‘보편적 등록제’로 전환하고 있음.
- (원인과 분석) 이는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실행을 보장하고 행정기구 개편과 행정기능 간소화 추진을 위한 조치로 분석됨. 대(對)중국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편리성이 제고되고 있으며 외국자본에 대한 감독과 관리는 사전감독으로부터 사중·사후감독으로, 형식적 관리로부터 실질적 관리로 전환되고 있음.
- (전망과 시사점) 우리 기업은 성실하게 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현재 중국에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자체경쟁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

## 1. 이슈 현황

### ■ 등록제도의 법적 근거

- ‘삼자기업법’과 ‘대만동포투자보호법’
  - 2016년 9월 3일 중국 전인대 상무위에서 개정
  - 국가에서 규정한 외자진입 특별관리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3자기업과 대만동포투자기업의 설립과 변경에 대해 기존의 심사비준제로에서 등록제로 변경
- ‘외상투자기업 설립과 변경 등록관리 잠행방법’
  - 2016년 10월 8일 중국 상무부에서 제정
  - 전국적 범위에서 외상투자 등록제 실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외상투자기업 설립과 변경 등록관리 잠행방법’ 개정안
  - 2017년 7월 30일 중국 상무부에서 반포

- 등록제의 적용범위를 중국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에까지 확장

## ■ (등록제도의 주요 내용) 기본원칙

### □ 등록 적용범위

-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이 국가에서 규정한 특별관리조치(또는 네거티브 리스트) 실시와 관련 없는 경우 적용
- 외국투자자가 非외상투자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상장회사에 대해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경우 특별관리조치와 관련사의 인수합병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 등록 주관기관

-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즉 상무부는 전국적 범위 내에서의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의 등록관리사업을 책임지고 통일적인 안내와 지도를 함.
- 구체적인 등록 업무는 상무부 산하의 상무주관부서에서 담당. 구체적으로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부(副)성(省)급 도시의 상무주관부서 그리고 자유무역시범구,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관련 기구가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의 등록기구로서 동 구역 내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의 등록관리사업을 책임짐.

### □ 등록 방식

- 등록기구는 외상투자종합관리정보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 주관

### □ 등록약정서 제출

- 외상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는 등록방법에 따라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등록신고약정서(備案申報承諾書)를 작성해야 하며 허위 기재나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안됨.

## ■ (등록제도의 주요 내용) 등록

### □ 설립 등록

- 기업명칭 예비심사를 받은 후 전체 투자자가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으로 위탁한 대리인이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외상투자기업설립등록신고표’(外商投資企業設立備案申報表, 이하 ‘설립신고표’)와 관련 서류를 입력 및 제출하고 설립등록 수속을 마쳐야 함.
- 등록은 영업허가증 발급 전 또는 외상투자기업이 지정한 대표 또는 위탁한 대리인이 영업허가증 발급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함.

-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의 경우 증권등기 결산기구에서 증권 등기 전 또는 등기 후 30일 내에 등록 수속을 마쳐야 함.

#### □ 변경 등록

-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내에 외상투자기업이 지정한 대표 또는 위탁한 대리인이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외상투자기업변경등록신고표'(外商投資企業變更備案申報表, 이하 '변경신고표')와 관련 서류를 입력 및 제출하고 변경등록 수속을 마쳐야 함.
- 외상투자의 상장회사 또는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에 등록된 회사에서 외국투자자가 소지한 지분 비율 변동이 누적 5%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지배적 지분 또는 상대적 지배적 지분의 지위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만 투자자 기본정보 또는 주식변경사항에 대해 등록수속을 할 수 있음.
- 외상투자의 상장회사가 유지한 신규 외국투자자의 전략적 투자가 등록범위에 속하는 경우 증권등기 결산기구에서 증권 등기 전 또는 등기 후 30일 내에 변경등록수속을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표에 입력해야 함.
- 등록완료 후 전략적 투자 등록정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증권법 및 관련 규정에서 요구한 정보공개의무자는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한 일자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함.

#### □ 제출 서류

- 외상투자기업 설립 또는 변경 등록 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함.
  - 외상투자기업의 명칭 예비심사 비준자료 또는 외상투자기업의 영업허가증
  - 외상투자기업 전체투자자 또는 그가 수권한 대표가 서명한 설립신고표 또는 변경신고표
  - 전체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으로 위탁한 대리인의 증명
  -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자 또는 법정대표자가 타인에게 위탁하여 서명한 관련 문서의 증빙서류
  - 투자자의 주체자격 증명 또는 자연인의 신분증명
  - 법정대표자의 자연인 신분증명
  - 외상투자기업의 최종 실제통제인 지분구조표(股權架構圖)
  - 외국투자자가 해외회사 지분을 지불수단으로 하는 경우 해외회사 지분을 획득한 국내기업의 '기업해외투자증서'(企業境外投資證書)

### ■ (등록제도의 주요 내용) 등록 심사

#### □ 등록기구의 심사

- 등록기구는 입력된 정보에 대해 형식상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심사를 하고 신고사항이 등록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
- 등록기구는 3영업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함.

- 입력한 정보가 형식상 완전 혹은 정확하지 않거나 경영범위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차적으로 온라인상에서 15개 영업일 내에 관련 정보를 보충 제출할 것을 고지
- 외상투자기업 또는 투자자는 동일 설립 또는 변경사항에 대해 5영업일 내에 재신청 가능

#### □ 등록 완료

- 등록 완료 후 외상투자기업 또는 투자자는 외상투자기업 명칭 예비심사비준자료(복사본) 또는 외상투자기업 영업허가증(복사본)에 의해 등록기구로부터 '외상투자기업설립등록수령증'(外商投資企業設立備案回執) 또는 '외상투자기업변경등록수령증'(外商投資企業變更備案回執, 이하 '등록수령증') 수령 가능

### ■ (등록제도의 주요 내용) 감독관리

#### □ 감독관리 기관과 방식

- 상무주관부서에서 감독검사 실시
- 상무주관부서는 표본검사, 고발에 의한 검사, 유관 부서 또는 사법기관의 건의와 반영에 의한 검사 그리고 직권에 의한 검사 가동 등 방식으로 감독검사를 전개

#### □ 감독관리 내용

- 규정에 따라 등록수속을 했는지 여부
- 입력한 등록정보가 진실·정확·완전한지 여부
- 외자진입 금지영역에서 투자경영 활동을 전개하는지 여부
-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고 외자진입 제한영역에서 투자경영 활동을 전개하는지 여부
- 국가안전심사에 어긋나는 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
- 등록수령증을 위조·변조·임대·대출·양도하지 않았는지 여부
- 상무주관부서에서 내린 행정처분 결정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 □ 신용정보 관리

- 상무주관부서와 기타 주관부서는 감독검사 과정에서 외상투자기업 또는 투자자의 신용 상황을 반영하는 정보를 상무부의 외상투자신용기록시스템(外商投資誠信檔案系統)에 입력
- ▲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 등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 등록수령증을 위조·변조·임대·대출·양도했거나 ▲ 감독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 상무주관부서에서 내린 행정처분 결정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관련된 신용정보를 상무부의 외상투자정보공시플랫폼(外商投資信息公示平臺)을 통해 공시
- 상무부는 관련 부서들과 외상투자기업 및 투자자의 신용정보 공유
- 상무주관부서는 외상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관련된 의무를 이행한 후 3년간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

#### □ 법적 책임

- 외상투자기업 또는 투자자가 규정을 위반하고 제때에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거나 등록 시 중대한 누락이 발생했을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황이 심각한 경우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외상투자기업 또는 투자자에게 아래의 3가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등록의무 이행을 회피거나 등록 진행 시 사실을 은닉하고 오도성 또는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등록수령증을 위조·변조·임대·대출·양도한 경우
  -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가에서 규정한 투자제한영역에서 투자경영 활동을 전개한 경우
  - 국가에서 규정한 투자금지영역에서 투자경영 활동을 전개한 경우
- 외상투자기업 또는 투자자가 상무주관부서의 감독검사를 회피·거부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상무주관부서의 감독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2. 원인과 분석

### ■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실행을 위한 제도적 보장 마련

- 2016년부터 중국은 전국적 범위에서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실행하고 있음.
  - 2016년 10월,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의 범위는 2015년 판(版)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투자제한 항목과 투자금지항목 그리고 지분비율 요구가 있는 투자권장항목이며, 외상투자기업 설립이 외자진입 특별관리조치와 관련이 없는 경우 등록관리가 적용된다고 규정함.
  - 2017년 6월, 2017년 판(版)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공표. 동 목록은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또는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규정하고 있음.
- 등록제는 네거티브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된 영역에 적용됨.
  - 중국은 네거티브 리스트의 금지항목에 대한 대중투자를 원천금지하고, 네거티브 리스트의 제한항목의 경우 정부 당국의 심사비준제를 적용하기로 함.
  -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제외된 항목에 대해선 등록제를 실행하기로 함.

### ■ 행정관리체제 개혁의 수요

-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후 중국은 ‘간정방권(簡政放權)’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관리체제 개혁을 단행하고 있음. 행정 간소화와 권한의 하부기관 이양을 핵심으로 하는 ‘간정방권’ 추진을 위해 정부는 기구 개편을 단행, 행정 기능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권한의 지속적인 하향 이양을 추진하고 있음.
- 등록제의 실행은 ‘간정방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 ■ 중국 內 경제체제개혁에 외부동력 마련

- 중국 내 경제체제 개혁의 도약과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라도 외부 충격에 의한 자생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30여 년의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 국내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했으며 외국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기업 경쟁력과 국력 향상에 도움 된다고 판단함.

## 3. 평가와 시사점

### ■ (평가) 대중투자의 문턱이 낮아지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음

- 심사비준절차가 적용되는 투자항목이 대폭 감소되어 대중투자의 95% 이상 항목에 등록제가 실행되고 5% 미만의 항목에만 심사비준절차가 적용되며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제출해야 하는 서면자료가 90% 이상 감소하면서 10여 페이지에서 많게는 몇 십 페이지까지 달하던 제출 서류가 몇 페이지로 줄어들었음.
-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평균 20여 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등록으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성이 크게 제고됨.

### ■ (평가) 외자관리는 사전(事前)관리로부터 사중·사후(事中事後)관리로, 형식적 관리로부터 실질적 관리로 전환되고 있음.

- 중국에서 등록은 고지(告知)성 등록임. 등록기구는 등록정보에 대한 형식적 심사만 하며 등록은 기업이 기

타 수속을 하는 전치조건도 아님.

- 상무부 및 산하의 상무부서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투자자들에게 자세한 정보 입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감독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이행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진행하고 있음.
- 감독과정에서 상무부와 직속 상무부서는 관련 행정관리부서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중국은 신용기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투자자의 신용을 관리하고 있음.
- 중국은 외상투자정보공시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보의 공유와 공개를 통해 사회의 감독을 유도하고자 함.

■ (시사점) 우리 기업은 성실하게 등록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성실하게 등록의무를 이행하고 등록 후에는 자기 기업의 등록사항에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함.
- 중국에서 신용불량 기업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현행 등록제도에 의하면 신용불량 기록은 최저 3년 유보하게 되어있어 기업 활동에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큼.

■ (시사점) 현재 중국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진행 과정에 있는 사업을 재점검하여 중국정부가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투자항목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지, 위법행위가 없는지 살펴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에서 VIE 구조<sup>1)</sup>로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정책의 추이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그동안 중국에서 회색지대에 속하던 VIE 구조가 점차 중국당국의 감독관리 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현재 중국의 외상투자 등록방법은 외국인투자자의 최종적인 실제 지배자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조만간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1) VIE는 가변이익실체(Variable Interest Entities)의 약어로 회계상의 개념이다. 2000년 엔론사태 이후 미국은 회계준칙을 수정하여 지분관계는 없으나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기업은 관계회사로 취급하여 재무제표를 합병하게 하였고 이것은 이후 국제적인 회계준칙으로 받아들여졌다. 중국에서 계약통제모델 또는 시나모델이라고도 불리는 VIE 구조는 2000년 시나닷컴(sina.com, 新浪网)이 최초로 미국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 후 그동안 중국 IT산업이 해외자금조달과 해외상장을 추진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옴과 동시에 또 외국기업이 우회적으로 중국 내 외국인투자 금지업종과 제한업종에 진출하는 유용한 방법으로도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관련 기업, 홈쇼핑기업들이 중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VIE 구조를 활용한 우회투자방법을 많이 사용하여 중국진출을 하고 있다.

■ (시사점)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자체 경쟁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

- 지난 30여 년간의 개혁개방을 거쳐 중국기업들은 엄청난 성장을 해왔음. 등록제 실행은 중국의 국내기업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함.
- 내외자일치 원칙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 현지에서 중국기업들과의 무자비한 경쟁에 노출되고 있음. 자체경쟁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거쳐 대중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투자 시에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투자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CSF**

💡 **알립니다**

- 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